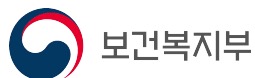


2019년 제16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아동정책 - 아동 = 0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책'

○일시 : 2019년 8월 6일(화) ~ 8일(목)

○장소 : 국회 · 국제청소년센터



사단
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
KOREA COUNCIL OF CHILDREN'S ORGANIZATIONS

2019년 제16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최·주관하여 2019년 8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동안 국회와 국제청소년센터에서 개최된 2019년 제16회 대한민국아동총회에 참여한 아동대표들은 아동정책 - 아동 = 0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제안합니다.

1. 세립이법¹⁾이 18세 미만 아동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학교에서 수준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체험 및 교육을 통한 단계별 진로탐색활동을 강화해주세요.
3. 17개 시·도에 진로교육원과 정기적인 진로 체험 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4. 학교폭력과 관련된 제도를 제정하는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아동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세요.
5. 스쿨존의 모든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설치해 주세요.
6. 학교 급식 메뉴를 선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7. 아동관련 사건 재판 시, 아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홍보해 주세요.
8. 학교·교육기관의 진로교육 자료를 최소 2년마다 최신화하고 홍보해 주세요.
9. 이주배경 아동과 한국아동의 문화 정체성 탐색을 위해 함께하는 문화 이해, 교류 캠프를 개최 및 지원해 주세요.
10. 교육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온라인 게시판을 개설해주세요.
11. 누구나 112에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매체에서 공익광고로 홍보를 강화해주세요.
12. 그린푸드존 내의 식품위생불량에 대한 신고(1399번) 및 대처 방법을 아동들도 알 수 있게 교육해 주세요.
13.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관련 보호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통합시켜 주세요.

이상과 같이 2019년 제16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아동대표들은 위의 결의문을 전달하면서 이의 실행을 위한 법률의 개정 및 제정 그리고 예산 지원을 통해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합니다.

2019년 8월 8일

2019년 제16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참여자 일동

1) 2014. 1. 28. 공포, 2015. 1. 29. 시행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343호) 상의 제52조 및 제53조를 말함.

2019년 제16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결의문 제안이유

1. '세림이법'이 18세 미만의 아동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황

- 세림이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2013년 3월 충북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 버스에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동승하게 하는 차량안전기준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보호자 동승 의무화, 안전띠 착용과 하차/승차 의무화가 주요 내용이다.
- 현재 세림이법은 아동의 범위를 만13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학차량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차량, 특수차량, 학원차량, 체육시설 차량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아동교통사고가 발생한 축구클럽의 경우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아도 영업을 가능해 도로교통법 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이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19.5.15. 인천 축구클럽 통원차량 사고로 자식을 잃은 고 김태호 아동의 부모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와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태호·유찬이법)을 발의하였다.)

2019.06.21. 전해숙 의원은 세림이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제점

- 세림이법의 제정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이 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범위를 13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세림이법에서 동승자 탑승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들이 많아 여전히 아동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인천 축구클럽 통원차량 사고, 청주 태권도 학원 차량 사고 등)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현행법은 법의 적용대상, 과태료의 강도가 이용자가 아니라 시설중심으로 되어 있어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세림이법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범위인 18세 미만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범위를 넓히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많은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아동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에서 개별수준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체험 및 교육을 통한 단계별 진로탐색활동을 강화해주세요.

#현황

- 초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진로탐색, 체험활동 등으로 자율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중학교에서는 아동들의 활발한 진로탐색을 위해 자유학기제(1학기 또는 2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진로탐색 활동 등의 자유학기 활동을 통해 잠재력 개발 등을 키우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4월 도입되어 42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었으며, 2018년부터 전체 중학교의 약 46%가 1학기가 아닌 1학년으로 확대 편성되었다.

#문제점

-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사설 직업체험기관에서의 체험형 방식으로 진로탐색이 이뤄지다가 중학생이 되면 갑자기 진지한 고민을 유도하는 교육방식의 차이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 간의 괴리가 크다.
- 따라서 비연속적이고 비체계적인 진로탐색활동으로 자유로운 진로탐색시간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할지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수요자인 학생들의 희망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준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로탐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동관점에서의 진정한 진로탐색과정이 될 것이다.

3. 17개 시·도에 진로교육원과 정기적으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현황

- 현재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교육원은 일부의 시·도(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에만 설치되어 있다.
- 설치된 진로교육원 역시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자유학기(년)제에 따라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진행할 때 적절한 공립체험시설이 없어 사설 직업체험기관(키자니아, 잡월드 등)을 통해 진로체험을 경험하고 있다.

#문제점

- 현재 학교에서 진로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사설 시설의 경우 영유아에게 맞춰 단순흥미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직업에 대해 탐색하는 시기인 초·중학생들이 체험하기에 수준이 맞지 않다.
- 아동들에게 다양한 자유학기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다.
- 아동들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진로탐색이 가능한 기관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으나, 이를 채워줄 적절한 기관이 부재하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전국 17개 시·도에 진로교육원이 설치되고 정기적인 진로체험과정이 운영된다면 지방에서도 접근성이 높아져 더 많은 아동들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고, 정부의 진로교육에 대한 아동들의 신뢰 및 실질적인 진로교육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4. 학교폭력과 관련된 제도를 제정하는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아동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세요.

#현황

-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운영하고 있다. 학폭위의 위원은 교감, 생활지도 경력교사, 학부모 대표, 경찰공무원, 의사, 판사·검사·변호사,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지도 경험자 등으로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이다.

#문제점

- 학교폭력은 아동들과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를 제정하는 과정에 아동입장에서의 시각이 부족하다.
- 학폭위를 운영하는 과정에도 아동은 위원자격에 포함되지 않아 아동들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학교폭력과 관련된 제도의 당사자인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제도가 제정되고 운영될 수 있다.
-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보고, 의견이 반영된 제도의 운영을 지켜보는 유의미한 경험을 통해 아동들이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폭력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아동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스쿨존의 모든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설치해 주세요.

#현황

-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동학로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표지판·속도측정기·신호등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
-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지난 5년(2013~2017년)동안 스쿨존에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만 5,930명의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 해 평균 약 3,000여 명의 어린이가 피해를 입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9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562건, 기타 453건, 신호위반 397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3학년 이하 저학년이 67%(9,76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횡단 중 사상자가 1만 1,730건 가운데 73.7%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가량인 49.3%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였다.

출처 : 원주신문 <http://www.iw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66>

#문제점

- 학교 근처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많아 아동들이 통학 시 위험을 느낀다는 의견이 많다.
- 24시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지만 많은 차가 지나다니는 곳에서 위험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도로횡단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스스로 길을 건널 판단을 하기 어렵고,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자발적으로 멈추는 경우가 적다.
-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아동인명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에서 발생하였고, 해당 스쿨존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10.11.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무인교통용 단속장비, 과속방지 시설 등 교통 안전시설설치 의무를 주요 골자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상·치사 가중처벌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019.10.15. 이명수 의원은 강훈식 의원에 이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통학 시 아동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통학길을 조성하여 아동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6. 학교 급식 메뉴를 선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세요.

#현황

-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고 있다.
- 학교에는 아동들의 급식에 대한 의견을 듣는 의견함이 설치되어 급식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 서울의 공립학교는 조례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돼 있다. 급식소위원회에는 학부모들의 참여는 있지만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문제점

- 적게는 하루 한끼, 많게는 하루 세끼를 모두 급식으로 먹는 아동들을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급식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의견함에 남긴 의견이 급식 메뉴에 반영되지 않아 의견함이 명목적으로만 설치되어 있다고 느끼는 아동들이 많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급식 만족도 조사 시 아동들이 체감하는 급식 의견 반영도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급식에 대한 아동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면 아동들의 급식 메뉴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들이 일상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어 변화를 이끌어 내는 유의미한 경험을 할 수 있다.

7. 아동관련 사건 재판 시, 아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홍보해 주세요.

#현황

- 성인 대상 재판과 동일하게 아동이 원고 혹은 피고로서 진행되는 민·형사적 재판 시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동의 의견만 심문, 증언 등으로 제시된다.
-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 있으나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배심원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문제점

- 아동들은 주체로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여론을 형성하거나 의견 반영을 요구하기가 성인에 비하여 어려우므로 아동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아동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사이트)를 만들어 이것이 활성화되면 아동들의 생각과 의견을 참고하여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을 배려하는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아동들이 자신들과 밀접한 사건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구체화시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줄 수 있다.

8. 학교·교육기관의 진로교육 자료를 최소 2년마다 최신화하고 홍보해 주세요.

#현황

- 각 학교에서는 교과서 및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진로교육을 하고 있다.
- 2018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진로정보를 주로 얻는 경로는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커리어넷이 44.8%,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55.6%가 커리어넷, 30.5%가 워크넷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전국대회 토론 중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진로교육 자료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아동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문제점

- 아동들이 학교 및 관련 온라인 사이트(커리어넷 등)에서 제공되는 진로교육 자료를 열람하면서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직업에 대해 간단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익숙하지 않은 직업이나 새로운 직업의 경우 사이트에서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어렵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빠르게 바뀌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아동들이 알고자 하는 현실적인 진로 및 직업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진로고민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9. 이주배경 아동과 한국 아동의 문화정체성 탐색을 위해 함께하는 문화 이해·교류 캠프를 개최 및 지원해주세요.

#현황

- 2018년도에 한국의 이주배경 아동은 법무부 추산 20만명으로 국제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출신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다.(2018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교육부의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 피해응답률이 1.3%인데 반해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5%로 3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다문화 학생 학교폭력 사망사건’ 이후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문제점

-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이 부족함에 따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아동들의 또래집단 내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또한 이주배경아동의 경우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탐색할 기회가 부족하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아동 자신의 문화정체성 탐색과 더불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류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0. 교육과정에 대한 아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온라인 게시판을 개설하고 의견을 반영해주세요.

#현황

- 현재의 교육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성인(전문가)들에 의해 설계되고 있다.
-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아동이 교육과정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문제점

-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의 당사자인 아동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이 없어 아동의 의견이 간과되고 있다.
-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 또한 아동중심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아동의 일상에서 가장 밀접한 교육과정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설계방법에서 발전하여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교육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교육과정에 대한 아동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아동들의 학업에 대한 의욕을 북돋을 수 있다.
- 성인 관점에서의 교과과정에서 아동주체적인 교과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11. 누구나 112에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매체에서 공익 광고를 통해 홍보해 주세요.

#현황

- 아직도 아동학대에 대해 남이 개입해선 안 되는 가정사로 취급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만 2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은 2018년도 2만 4604건으로 5년간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1만 9365건으로 78.7%로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 2018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
- 현재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이용하는 매체는 방송, 인쇄, 웹툰이 있다.

#문제점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누구나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매체가 TV에서 컴퓨터,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화함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공익광고를 송출하는 매체를 확대하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아동학대가 조기에 발견되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가해자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민감한 사회분위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학대 아동이 구조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회로서 아동들의 보호권이 보장될 수 있다.

12. 그린푸드존 내의 식품위생불량에 대한 신고(1399번) 및 대처 방법을 아동들도 알 수 있게 교육해주세요.

#현황

- 그린푸드존(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아동을 위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불량식품이나 건강에 해로운 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에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 판매업소의 식품 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을 실시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도록 되어있다.

#문제점

- 2009년부터 그린푸드존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시행 이후 실질적인 홍보나 실태조사, 관리는 부족하다.
- 그린푸드존에서 식품위생이 불량하거나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아동이 직접 목격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격 시 대처방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불량 먹거리에 대한 신고율이 높아지면서 먹거리 안전이 지켜지고, 아동들이 불량한 식품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적극적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

13.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관련 보호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통합시켜 주세요.

#현황

-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구역은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이외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그린푸드존,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이 있다.
- 2014년 교육부는 위의 네 가지 구역을 통합하여 ‘학생안전지역’을 시범운영하였으나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학생안전지역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발표와 달리 아직 제도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문제점

-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해 아동이 직접적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아동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비슷한 구역에 대해 혼선이 있고, 담당부처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아동의 건강권과 보호권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구역을 통합시킴으로써 모두가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안전에 동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